

민주, 의총서 '선거구제 개편' 당론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 연동형 의석배분 등 통해 비례적 반영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고 당론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의원 전원 명의 로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당은 기존입장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수했다. 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성 개선만으로 대표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 국회는 지역구 정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국민 전체의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의 균형을 통해 대표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10% 내에서 증원여부를 검토하되, 현재 정수를 유지하는 데서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이다. 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개혁, 정당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국회와 정치를 개혁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표다.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

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 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이 정치권에 허락한 시간만 길지 않다. 여야합의의 합이 정수는 이번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는 것이다. 그 합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檢, 김태우 해임 요구

수사 개입 · 과기부 승진 전보 시도 등 비위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 김태우씨를 중징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검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품위유지위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위무 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돼 있다. 또 특별반 당시 골프 접대 의혹으로 청와대로부터 비위 통보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를 요구했다.

향응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김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다른 수사관 2명은 김씨와 함께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본부는 김씨가 특감반 시절 수집한 ‘우윤근 1000만원 의혹’ 등 각종 첩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청와대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인정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것이다.

김씨를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29일까지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것이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김씨에게는 ▲이해충돌 방지 · 청렴 · 성실 · 품위유지위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위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위반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이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10월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겸직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지난 11월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확인할 관한이 없음에도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특감반 소속 수사관 4명을 원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이중 3명을 조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검 검찰본부는 지난해 3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검찰 대상자들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사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으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특감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 측이 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뉴시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과기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자신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과기부가 개방형 5급 사무원 채용 절차를 통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를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 접대 등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과기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자신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과기부가 개방형 5급 사무원 채용 절차를 통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를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 접대 등

“힘센 소도 경운기 대신 못해”... 문 대통령, 농정혁신 강조

농업인 초청 간담회 “농업 지속가능성 위협 더 이상 농업 방치해선 안돼 스마트 농정 걱정 알아 시작과 끝은 농민 중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무리 힘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농정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학생 농부 한태웅 군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쌀을 선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업인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농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립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스마트 농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다.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만들어져왔고, 또 오늘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됐다”며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작물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며 “6000억 달러 수출

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가 소득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612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축산인은 가축 질병으로 고통 받고, 농촌은 축산분뇨 처리로 고통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 농민들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의 농촌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 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례적 수급 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그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를 위해 서라도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여야, 31일 운영위 소집 합의... 임종석 · 조국 출석

여야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31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 발표했다. 여야는 ‘위협의 외주화’를 방지하

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김용균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다만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 대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등은 일부 후퇴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이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